

# 내년 3월 밑그림...시·도 공동대응 방침 속 물밑 협의

## ■ '공공기관 이전 시점2' 추진 상황과 광주시·전남도 대응책

혁신도시 시점 2사업 밑그림은 내년 3월 이후에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1차 혁신도시 성과를 평가하고 2차 사업의 방향성이 담긴 정부 용역이 3월 중 완료되기 때문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여당 간, 시·도 간 협의 등 남은 절차가 상당하다. 만에 하나 10개 혁신도시 외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할 경우 관련법 개정까지 거쳐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제각각 유치 희망 공공기관 리스트를 작성하고 준비했다가 최근 열린 개최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도가 공동 조성하면서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양적·질적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지역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 공공기관 이전 및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어떻게=지역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광주시 등에 따르면 2차 공공기관 이전사업의 방향성은 국토교통부가 현재 추진 중인 혁신도시 관련 용역이 마무리 된 뒤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용역에는 혁신도시 시점 1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2차 사업 밑그림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정부안이 마련되면, 민주당과의 협의·조정을 거쳐게 된다. 이후 광역단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은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할 것인지, 기존 10개의 추가 혁신도시를 지정할 것인지 여부, 지역별 안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는 것은 법

국토부 용역 토대 정부안 마련  
충청권 등은 세미나·토론회  
"수도권 요구에 묻히지 않게  
지역균형발전 목소리 내야"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충청권 요구처럼 추가 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법개정 등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어떤 것을 어느 지역으로 보낼지를 비롯해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은 최대 489곳이 될 것이라는 분석은 노무현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이민원 광주대 교수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광주시, 전남도 대응 어떻게=정부와 여당에 목소리를 내는 타 광역단체와 달리 광주시·전남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공개 행사나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울산 등 일부 광역단체는 저마다 2차 공공기관 유치 희망 기관을 발표하고, 관련 토론회와 세미나를 잇따라 열면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충청권의 경우 충청권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하면 광주시·전남도는 조용한 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타 시·도와 경쟁 구도가 아니다. 1차 이전을 통해 지역별 특색(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는 에너지관련)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라며 "전남도와 함께 물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대구 달서구 계명대 체육관에서 열린 독도 해역 헬기 추락사고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에서 유가족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 기관 선정 작업 등 공동 대응 중이다. 내년 3월 이후 정부 방향성이 제시되면 본격적으로 희망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광주시 입장에 대해 한가롭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국토균형발전 의지가 약해지는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향해 지역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원 교수는 "민주당은 수도권 표심에 밀려 공공기관 이전 의지가 약해질 공산이 크다. 지역 균형 발전 요구가 또다시 수도권 목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시·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한때 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시·도간 제각각 유치 희망 기관을 선정하고 정부와 당을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11월 25일 광주시청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거치면서, 시·도는 협의체를 꾸려 유치 희망 공공기관 목록을 함께 작성하고,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는 작업도 함께 해 협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김형호 기자 khh@

## 문 대통령 "국민 안전, 무한한 책임감"

### 순직 소방관 영결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독도 해역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다급하고 간절한 국민 부름에 가장 앞장섰던 고인들처럼 국민 안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계명대 체육관에서 열린 독도 해역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 소방항공대원 5명에 대한 합동영결식에 참석, 추모사를 통해 "다섯 분의 헌신·희생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소방관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 역시 국가의 몫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헬기가 응급환자 이송 중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 소방항공대원 5명과 환자 등 민간인 2명이 숨졌다. 당국은 이 중 4명의 시신을 수습했지만, 대원 2명과 민간인 1명을 찾지 못했다. 당국은 유가족 등과 협의해 사고 발생 39일째인 지난 8일 수색을 종료했다.

2004년 소방방재청 신설 이후 중앙정부나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영결식을 개최한 것과 소방공무원 합동영결식에 대통령이 참석해 추모사를 한 것도 최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을 '영웅'이라 칭하며 "저는 오늘 용감했던 다섯 대원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리고

자 한다"며 "또한 언제 겪을지 모를 위험을 안고 묵묵히 헌신하는 전국의 모든 소방관과 함께 슬픔과 위로를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섯 대원은 어두운 밤 멀리 바다 건너 우리 땅 동쪽 끝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한 치 망설임 없이 임무에 나섰다"며 "국민 생명을 구하는 소명감으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훈련받고 동료애로 뭉친 다섯 대원은 신성한 응급처치로 위기를 넘겼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의 영웅들은 그날 밤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거친 바다 깊이 잠들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비통함과 슬픔으로 가슴이 무너졌을 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들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소방 잠수사들, 해군·해경 대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희생이 영원히 빛나도록 보존에도 힘쓰겠다"며 "가족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 소방가족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국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모든 소방가족의 영원이었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률이 마침내 공포됐다"며 "오늘 다섯 분의 영정 앞에서 국가가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 자부심과 긍지를 더욱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

드린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 여야 4+1, 호남 지역구 지키기...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 '3년 평균'으로

### 부칙 신설 잠정 합의

### 석패률제·준연동률은 이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호남 등 농산어촌의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3년 평균치로 산출하는 내용의 부칙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안신당 관계자도 "선거구 획

정위원회에서도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보다 확고한 부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협의체는 지역구를 250석, 비례대표를 50석으로 각각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는 현재 지역구(253석)에서 3석만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도 선거구 획정 원칙을 적용하면 전남의 여수갑과 전북 익산 갑 등은 통폐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의 1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인구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31일(5182만6287명)이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구 획정 기준

일이다. 또 아울러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대 1을 넘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따라야 한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정에 적용하는 인구 기준을 변경하는 위한 부칙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부칙이 마련된 것은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계 야당들이 호남 지역구만 축소되는 기준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농산어촌의 경우,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라는 점에서 1년으로 인구 기준을 삼는 것보다 3년 평균으로 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의 또 다른 쟁점인 석패율제와 관련해선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도입한 대로 석패율제에 의한 후보를 권역별로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지하거나 아예 석패율제를 폐지하는 입장인 반면, 소수 야당들은 전국 단위 석패율제로 조정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례대표의석의 절반만 '준연동률'을 적용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견이 첨예한 상황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062)531-3530 H.010-9229-3530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뽐뽐~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